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입니다. 여기서 중대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법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의 준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의견 1) 예산 문제

중대 재해 법이 도입되면 비용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원청의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 부담으로 사업확장을 주저하거나 도급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견 3) 모호성

법안의 규정 곳곳에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이 많아 적절한 대응이 힘들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열사병 환자만 나오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되며 충실한 수행, 적정한 예산 편성과 같은 추상적인 조항은 법 준수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 2) 과잉 법안

우리나라는 중대 재해 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처벌 강도가 이미 강력한 수준이고 영국 등 해외사례를 볼 때 처벌을 강화해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보다는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염려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 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 모호성, 현실성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주들로 하여금 위축과 염려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중대 재해 처벌법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펼칩니다.